산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광주시, 3.49㎢ 2774 필지
면적 초과시 계약 전 허가 의무
부당거래시 2년 이하 징역·벌금

광주시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 3.49㎢(2774필지)에 대해 3월 2일 자로 1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021년 2월 집값 안정을 위해 2029년까지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3000㎡(약 51만평)에 1만3000가구, 생활기반 시설, 자족 용지 등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이후 땅 투기 의혹과 일부 원주민의 개발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해당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해당 자치단체(광산구)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양병옥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해 지가급등 등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22년 9월 7일부터 2025년 9월 6일까지 3년간 광산구 송정·월전·장록·송촌동 일원 광주송정역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역(면적 0.56㎢)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으며,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서구 마륵동·치평동 일원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예정지역(0.34㎢)을 신규 지정한 바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저온 피해 여수 양식장 방문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여수시 돌산읍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 폐사 피해 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어가 복구계획 수립 등 신속 지원"을 당부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광주 제조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공장 인프라 구축

14개사 7억원 한도 지원…희망 기업, 다음달까지 신청

광주시는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7억원 한도로 14개사 안팎의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50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월 28일) 현재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광주에 소재한 제조 기업이며, 신청기간은 3월 31일까지다.

특히 창업 제조업과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 프리(Pre) 및 명품강소기업을 '스마트제조 집중지원군'으로 분류해 제조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도형 스마트공장(고도화)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집중육성군은 스마트공장 구축에 참여하면 우대가점을 주고,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정해 사업 기획부터 사후 관리,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까지 1대 1 전주기적 밀착지원을 한다.

지원 기업은 참여기업 요건 검토, 현장 평가, 기술성 평가를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와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선정 기업에 대한 시비 지원에 이어 정부지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제조업체를 위해 자체 지원계획으로 마련한 것이다.

광주시는 스마트공장 도입·공급기업,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 등을 열어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제조혁신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2024년부터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스마트공장은 기업의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면서 "광주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제조혁신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도형 스마트공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단수 사태 특정감사

다음달 6~17일 매뉴얼 적정성 등

광주시가 정수장 밸브고장으로 생긴 대규모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다음 달 6~17일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장을 설치하고 특정감사를 벌인다. 감사위는 수돗물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노후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 안전 문자 발송, 긴급 복구, 사고 행동 매뉴얼 이행 과정 등 적정성을 감사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광주 덕남정수장 송수관로 밸브 고장으로 2만 8576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으며, 수돗물 5만여t이 넘쳐 흘러 정수장 입구 농경지, 도로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갑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사고 원인 등을 명확히 규명해 문제가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남도장터, 운영 효율성 높인다

초대 대표이사 등 4개 안건 의결…유통 등 전문가 4명 이사 선임

지난해 6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남도장터의 첫 법인 대표로 김경호 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이 선임됐다.

(재)남도장터는 재단을 이끌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초대 대표이사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공개채용 공고 등 공모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재단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수산과 축산 분야 전문가 및 유통 분야와 온라인 쇼핑몰 운영 전문가 등 4명의 선임직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기로 해 15명 이사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 초대 대표이사는 순천 출신으로 전남대 행정대학원(정책학과)을 수료했으며, 오는 3월부터 2년 동안 (재)남도장터를 이끈다.

전남도는 "재단법인 남도장터가 27일 도청에서 2023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어 운영 효율을 위한 수산·축산·유통 분야 전문가 이사 추가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 본격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이사장인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이사회 임원 등이 참석해 ▲초대 대표이사 선임 ▲이사 추가 선임 ▲2023년 세입·세출 예산 변경 승인 ▲재단 내부규정 제정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업 계획과 예산 변경안 승인을 통해 2023년 전남도 사업예산으로 반영된 국내·외 농축산물 온라인 판매망 구축사업을 재단에서 대행한다. 이로써 당초 출연금 20억원과 국비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환사업인 쇼핑몰 운영 대행사업비 21억원을 추가, 총사업비 41억원으로 올해 재단과 쇼핑몰을 운영한다.

재단법인 남도장터는 전남 농축수산물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를 책임 운영하는 전남도 출연기관으로 지난해 12월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했다.

재단이 운영할 남도장터 쇼핑몰은 2004년 개설된 온라인 쇼핑몰로 매출액 3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603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2023년 1월 말 기준 1826개 업체 3만3155개 상품이 입점했으며 43만 명의 온라인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역주도 과학기술 발전 방안 논의

전남도, 과학기술발전위 총회…정부정책 대응 과제 발굴 등

전남도는 2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3년도 제1차 전남 과학기술발전위원회'를 열어 정부 과학기술정책에 대응한 지역 주도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최용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광주·전남지역연합회장, 박기영 순천대 대학원장, 범희승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강연, 위원회 기획과제 발표, 2023년 위원회 활동계획,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강연에선 이상연 전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장이 '전남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전남도 연구개발사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투자심의국에 근무할 때 정부 연구개발예산 심의 경험을 살려 정부 연구개발예산 수립 절차와 이에 따른 시기별 세부 대응 전략도 설명했다.

이어 기획과제 발표로 지난해 위원회에서 기획한 7개 과제 중 박대훈 동신대 교수와 전희석 목포대 교수가 각각 천연물 산업 육성 및 통신용 반도체 제조기술 개발 등 대표 2개 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위원회 활동 계획과 전남 과학기술 발전 방안 전반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참석자는 정부 정책에 맞고 전남도의 강점을 살린 전략적 과제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했다. 또 연구개발이 실험실을 넘어 지역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보다 임무 지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창환 부지사는 "올해는 지난해 말 발표된 정부의 과학기술 주요 정책 예산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전남의 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위해 위원회가 분과별 참신한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산·학·연 혁신 주체가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많이 수주하도록 함께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